

대전광역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2020. 11.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ITY COUNCIL



나라살림연구소
Fiscal ReForm Institute

제 출 문

대전시의회 귀하

이 보고서를 ‘대전광역시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휴머니티스 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 희 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김 민 수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차 례

1. 연구개요	1
가. 연구범위	1
나. 연구배경	1
다. 연구내용	1
2. 종합분석 결과	3
가. 검토기준	3
나. 용어의 정의	3
1) 용어의 설명	3
2) 문제유형별 정의	3
다. 정합성 분석결과	4
3. 위원회별 분석 결과	10
가. 행정자치위원회	10
1) 정책기획관	10
2) 성인지정책담당관	12
3) 예산담당관	20
4) 국제협력담당관	21
5) 정보화담당관	22
6) 스마트시티담당관	23
7) 대변인	24
8) 시민안전실	24
9) 자치분권국	28
10) 문화체육관광국	32

나. 복지환경위원회	45
1) 공동체지원국	45
2) 청년가족국	50
3) 보건복지국	52
4) 환경녹지국	54
다. 산업건설위원회	62
1) 일자리경제국	62
2) 과학산업국	68
3) 교통건설국	72
4) 도시재생주택본부	78
5) 건설관리본부	84
라. 교육위원회	86
1) 교육국	86
2) 기획국	88
3) 공보관	90
4) 교육지원청(동부, 서부)	90
4. 한계 및 시사점	92

표 차 례

[표 1] 문제유형별 현황	4
[표 2] 위원회별 문제사업 현황	4
[표 3] 전체 문제사업 현황	5

1. 연구개요

가.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대전광역시
- 내용적 범위 : 대전광역시 자체사업 중 조례 정합성 일치 여부
- 연구기간 : 2020년 9월 ~ 2020년 11월

나. 연구배경

- 대전시는 재정사업을 조례 및 법률, 지침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을 예산사업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음
- 예산사업설명서에 제시한 근거 조례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해 재정사업과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 연구내용

☐ 재정사업과 근거 조례의 정합성 분석

- 2020년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근거조례가 사업 내용과 부합하는지 점검
- 조례의 조문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근거 조례의 내용이 사업 추진의 근거로 충분한지 등을 분석

☐ 재정사업 및 조례 개선 방안 제시

- 근거 조례에 비추어 사업의 변경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 내용의 개선 방안 제시
- 사업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의 개선 방안 제시

□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 정합성 제고 방안 제안

- 2021년 예산 편성시 개선 사항 적용 방안 제안
- 재정사업과 조례 연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편성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안

2. 종합분석 결과

가. 검토기준

□ 시비 100% 사업대상 조례정합성 여부 분석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시비100%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재정사업과 조례의 정합성을 확인하였음
 - 다만 시구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100% 사업으로 인정하여 분석을 시행
- 시비가 100% 투입되는 사업 중 조례로 관련 내용을 정의하지 않아도 되거나 조례로 정의를 해야하나 대전광역시에 관련 조례가 부재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을 제사하였으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조례가 부재한 경우 타 지자체와 비교를 통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하였음

나.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설명

- 사업내용 : 조례와 사업의 정합성 분석을 위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의 핵심적 사항이나 목적 등 특징적인 사항을 기록
- 근거법령 : 세부사업설명서 상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의미

2) 문제유형별 정의

-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사업내용과 법적근거가 적합하지 않아 해당 법적근거가 아닌 다른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 조례 정비 :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근거법령 미기재 :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해당없음’이나 표기 누락한 경우
- 관련 조례 부재 : 상위법령은 존재하나 필요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 사업추진 근거로 제시한 법령이 사업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조례의 정의를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한 경우

다. 정합성 분석결과

□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가 72개로 최다

- 전체 문제사업 중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가 76개로 59.8%를 차지하였고 이어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26개(20.5%), 관련 조례 부재 13개(10.2%) 순

[표 1] 문제유형별 현황

(단위 : 개, %)

문제유형	개수	비율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76	59.8%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26	20.5%
관련 조례 부재	13	10.2%
근거법령 미기재	10	7.9%
조례 정비	2	1.6%
합계	127	100.0%

□ 행정자치위원회가 54개로 최다

- 행정자치위원회가 54개로 42.5%를 차지하였고 이어 복지환경위원회가 34개(27.6%), 산업건설위원회가 28개로 22.0%를 차지

[표 2] 위원회별 문제사업 현황

(단위 : 개, %)

위원회명	개수	비율
행정자치위원회	54	42.5%
복지환경위원회	35	27.6%
산업건설위원회	28	22.0%
교육위원회	10	7.9%
합계	127	100.0%

[표 3] 전체 문제사업 현황

위원회	부서		사업명	문제유형
행정자치 위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위원회 참석수당	근거법령 미기재
			현안사업 추진 용역	근거법령 미기재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성인지정책담당관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 부재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여성복지시설 거주자 위문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전국여성대회 참가지원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양성평등 기념행사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여성인재유 관리시스템 구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양성평등교육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대전여성이족정책센터 운영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교류센터 위탁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거주외국인 대전생활안내 책자 제작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위원회	부서		사업명	문제유형
			거주외국인 지원단체 민간제안 공모사업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정보화담당관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관련 조례 부재
		스마트시티담당관	CCTV통합관제센터 노후 관제 PC 교체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대변인		주요시정 홍보 등 관련 사업 일체	관련 조례 부재 / 근거법령 미기재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조성을 위한 서업 일체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환경방사능 측정용역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박람회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운영지원과	집중관리기관 조정관리	근거법령 미기재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시설물 정비	근거법령 미기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숲속의 열린음악회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작은도서관 문화의 중심이 되다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태권도 상설공연단 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시소속 운동부 육성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위원회	부서		사업명	문제유형
			공공체육시설 운영유이탁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전승기록화 학술 용역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관광마케팅과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표지 판 정비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관광콘텐츠과	홍보물 제작 등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시립미술관		소자옴전(상설전)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대전예술의전당		기계,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	근거법령 미기재
			공연광고비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공연홍보물 인쇄비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공연 안내 리플릿 제작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대전시립박물관		한국문화전 외 5개 사업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복지환경 위원회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지원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마을기업 육성사업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 업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학교 무상급식 지원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청년가족국	교육청소년과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사업 지원	관련 조례 부재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감염병업무 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 술 및 교육지원	관련 조례 부재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 과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 원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탄소포인트제 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위원회	부서		사업명	문제유형
			천연가스차량 구입 및 연료비 보조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공원녹지과	녹색도시 조성	근거법령 미기재
			공원관리 사업 일체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자원순환과	실버청결도우미 사업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하천관리사업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관련 조례 부재
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국	농생명정책과	반려동물 문화축제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축산업 육성 지원	관련 조례 부재
			특화작물 생산단지 시설지원 외 3개 사업	관련 조례 부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사업 일체	관련 조례 부재
			벼 영농자재 통합지원 외 3개 사업	관련 조례 부재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	과학기술인재 활용 지역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수소충전소 운영(구축사업 포함)	관련 조례 부재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대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택시 감차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생활권 자전거 도로 정비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지하안전위원회 참석수당	근거법령 미기재 /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공공교통정책과	보호구역 유지관리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위원회	부서		사업명	문제유형
		도시재생과	테미오래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	조례 정비
			관사촌 시설관리	조례 정비
		주택정책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도시경관과	갑천변 물빛길 조성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가수원교 및 대덕대로 야간경관 조성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건축정책위원회 참석수당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토지정책과	도로명주소 홍보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건설관리본부	투자유치과	대전산업단지 관리 위탁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교육위원회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통일대비교육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대전친구사랑3운동 운영지원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체육예술건강과	학교급식관리지원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스쿨존교통안전지도인력지원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공보관		교육홍보사진촬영 운영 및 옥외홍보매체운영	근거법령 미기재 / 관련 조례 부재
	교육지원청(동부,서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3. 위원회별 분석 결과

가. 행정자치위원회

1) 정책기획관

□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 (사업내용) 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운영지원
- (근거법령) 출연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제2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 제5조(운영경비)
 - 제5조(운영경비)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입과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시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위원회 참석수당

- (사업내용)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경제성검토를 위한 위원회 운영
- (근거법령) 해당없음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
 -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미기재

□ 현안사업 추진 용역

- (사업내용)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용역사업과 업무추진 중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용역 추진
- (근거법령) 해당없음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용역, 기술용역으로서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9조(예산편성전 심의) ① 시장은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미기재

□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자치구와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특성에 맞게 인구증가 시책 개발
-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관·단체 등 지원)
 - 제10조(기관·단체 등 지원) ①시장은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2) 성인지정책담당관

□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 (사업내용) 성매매피해 위기청소년 상담 및 자립지원
- (근거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제25조(비용의 보조)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참고사항) 경기도 및 대구는 성매매피해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
 - 성매매피해자에게 자활시책, 실태조사, 시설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과 생계유지, 주거이전, 직업훈련 등의 예산 지원
 - 다만 지원대상으로 지역 내 성매매집결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정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 (사업내용) 성매매 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및 도시재생의 방향성 제고 및 대안 마련
- (근거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용역, 기술용역으로서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9조(예산편성전 심의) ① 시장은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원)

○ (사업내용) 5개구 지역사회안전망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 및 제11조(사업비 지원)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법령수정)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여성복지시설 거주자 위문

○ (사업내용)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주자 대상 명절 위문품 지원

○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5조(비용의 보조)

-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법령교체) 성폭력방지법 제25조는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26조(경비의 보조)가 적합

-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2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도 적용

- 제12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전국 여성대회 참가지원

- (사업내용) 대전여성 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전국여성지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전여성단체협의회의 참가비 지원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 제3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①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령수정) 올해 10월 14일 관련 조례 전면 개정으로 인해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조례 조항 수정 필요
 - 기존 제23조가 제39조로 변경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양성평등 기념행사

- (사업내용) 양성평등 주간행사(기념행사, 여성대회, 문화행사 등) 개최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양성평등주간)
 - 제37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① 시장은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의 개최 또는 행사의 유치 및 시행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법령수정) 올해 10월 14일 관련 조례 전면 개정으로 인해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조례 조항 수정 필요
 - 기존 제20조가 제37조로 변경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여성인재DB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발굴된 전문 여성인재DB관리시스템 구축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 제29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법령수정) 올해 10월 14일 관련 조례 전면 개정으로 인해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조례 조항 수정 필요
 - 기존 제14조가 제29조로 변경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양성평등교육

- (사업내용) 시민들의 양성평등 의식문화 교육담당 강사 양성 및 파견으로 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7조(양성평등교육)
 - 제17조(양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여성가족원에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강사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법령수정) 올해 10월 14일 관련 조례 전면 개정으로 인해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조례 조항 수정 필요
 - 기존 제17조가 제34조로 변경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

- (사업내용) 여성가족 정책 개발연구와 실행하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8조(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제23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 제35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2.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3.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법령수정) 올해 10월 14일 관련 조례 전면 개정으로 인해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조례 조항 수정 필요
 - 기존 제18조가 제35조로 변경
 - 기존 제23조가 제39조로 변경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 (사업내용) 대전광역시새일센터 추진하는 취창업 희망여성들에게 직업정보 제공 및 취업기회 마련으로 여성구인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 제29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법령수정) 올해 10월 14일 관련 조례 전면 개정으로 인해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조례 조항 수정 필요
 - 기존 제14조가 제29조로 변경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 (사업내용)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대전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 (근거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1조(포상)
 - 제41조(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센터 운영비용 지원(민간위탁금 및 자산물품취득)
- (근거법령)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

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7조(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제7조(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
 2. 품앗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
 3. 맘코치 양성
 4. 배달강좌
 5. 그 밖에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3) 예산담당관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 (사업내용) 대전시 출연기관 9곳의 경영전반과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용역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8조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4)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교류센터 위탁운영

- (사업내용) 국제교류사업 및 자매우호도시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민간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위탁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운영비 지원)
 - 제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령수정) 올해 10월 14일 관련 조례 폐지 및 관련 내용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로 조례 통합으로 인해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조례 조

항 수정 필요

- 제5조(국제교류 협력 사업) ① 시장은 국제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외국 도시·대학·기업과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
 - 2. 국제대회·회의·행사 등 유치 및 지원
 - 3.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에 관한 사업
 - 4. 민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5.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거주외국인 대전생활안내 책자 제작 및 거주외국인 지원단체 민간제안 공모사업

- (사업내용)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 추진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 (법령수정) 2019년 12월 27일자로 조례명 변경(「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및 조례 전면 개정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5) 정보화담당관

□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

- (사업내용) 다중이용시설 및 청년밀집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설치
- (근거법령)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 (참고사항) 부산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 15일에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하여 공공 와이파이 설치 및 구축 관리운영지침 수립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6) 스마트시티담당관

□ CCTV통합관제센터 노후 관제PC 교체

- (사업내용)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PC 노후화 및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노후PC 교체
- (근거법령) 행안부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 관련 대응방안 통보 및 국정원 MS사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 대비 보안대책 이행 통보 요청
- (법령수정)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제9조(통합관제센터 운영)
 - 제9조(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예산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4.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보안 및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7) 대변인

□ 주요시정 홍보비, 방송매체 및 전자홍보매체(문자, 영상) 활용 시정홍보 등 홍보 관련 사업

- (사업내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시책을 홍보
- (근거법령) 미기재
- (참고사항) 홍보관련 사업을 일괄할 수 있는 조례 부재
- 경기 광주, 군포, 충남 천안 등 기초단위에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제정
 - 「대전광역시보 조례」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에서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나 사업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로는 미흡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 근거법령 미기재

8) 시민안전실

가) 안전정책과

□ 국민안전교육 자체평가 심사수당 /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교구 임대 /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사업내용)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일체
-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제3조(책무) 및 제4조(사업)

-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 사업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업
 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해당 조례가 2019년 12월 27일 제정되어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조례 적용 필요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환경방사능 측정용역

- (사업내용) 원자력관련 시설 부지주변 방사선 환경조사·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능 핵종분석과 유효선량(방사선량률) 측정
- (근거법령)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제34조, 제104조
 -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34조(준용) ①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의 각종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제16조·제18조·제19조·제22조·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 제104조(환경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
2.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에게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제4조(원자력안전대책)

- 제4조(원자력안전대책) ① 시장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에 관한 사항
 3. 정부, 자치구, 원자력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 소통과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안전 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9) 자치분권국

가) 자치분권과

□ 국가균형발전박람회

- (사업내용) 대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례·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박람회 참여로 지역 잠재력 우수성 홍보 및 지역경제 발전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제4조(기업유치 의무)
 - 제4조(기업유치 의무)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한 보조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해당 조례는 기업체 유치에 목적을 둔 조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박람회 참가 근거로는 미흡
- 경남,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 지역 내 각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가능
 -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 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

○ (사업내용)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 (근거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내용) 3.8민주의거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홍보를 위한 민주화 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근거법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법령교체) 3.8민주의거를 기념하기 위한 유사 사업인 '3.8민주의거 기념사업'은 해당 조례를 근거로 했으나 본 사업은 상위법령만 기재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기념사업)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8민주의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3·8민주의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3·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8민주의거 기념행사
 2.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의 개발·연구
 3.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전시
 4. 3·8민주의거 기념 및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문화·교육 사업

5. 3·8민주의거 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

6. 3·8민주의거 정신의 전국적·국제적 확산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3·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나) 운영지원과

□ 집중관리기간 조경관리

- (사업내용) 청사 내 잡초제거와 계절 꽃 식재가 집중되는 3월~11월에 조경관리 전문공사 실시
- (근거법령) 미기재
- (참고사항) 지원근거 항목에 지원사유를 기재
 - 관리집중시기(3월~11월) 꽃식재, 제초관리 등의 한시적인 작업인력 부족으로 불가피
- (문제유형) 근거법령 미기재

□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시설물 정비

- (사업내용) 청사 내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지작업과 고사목 갱신 및 편익시설 설치 및 보완으로 조경시설물 정비
- (근거법령) 미기재
- (참고사항) 지원근거 항목에 지원사유를 기재
 - 청사준공 20년 경과 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노후 조경시설 교체·정비에 주력 추진
- (문제유형) 근거법령 미기재

10) 문화체육관광국

가) 문화예술정책과

□ 숲속의 열린음악회

- (사업내용) 보문산 숲속공연장에서 클래식, 국악, 대중가요 등 공연
-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2조의2(보조금 지원)
 - 제12조의2(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어, 인문학 및 독서문화 증진 사업
 2. 우수 예술지, 문학지 발간 사업
 3. 문화예술 장르별 시민축전 및 예술제 지원 사업
 4.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업
 5.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 미술상 및 음악상 지원 사업
 6.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
 7.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
 8.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사업
 9.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및 건축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사업
 10.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11.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관련 사업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작은도서관 문화의 중심이 되다

- (사업내용) 관내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4조(예산지원)

-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성 및 설치비
 2.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3.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시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사업내용) 시 및 자치구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

○ (근거법령)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제3조(이용시간)

-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6시부터 23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7시부터 23시까지
 3.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분개관하는 경우 : 9시부터 18시까지
- ② 관장은 도서관 자료정리,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사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근거로 든 법령은 운영비용의 보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시 산하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 조례에는 이용시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근거를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합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 (사업내용) 경기단체 운영 지원 및 실업팀 지원과 우수선수 육성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 제2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태권도 상설공연단 운영

- (사업내용) 태권도 상설 시범단 운영으로 시민 볼거리 제공 및 체육활동 관심 유발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3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 제23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사업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지원 사업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사업
 4. 생활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사업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사업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이외에도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 ‘스포츠 7330 걷기대회’,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세대공감 생활체육 프로젝트’, ‘주민공동체 스포츠클럽 리그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펜싱학교 운영’ 등의 사업도 동일한 조례 조항 적용 가능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시소속 운동부 육성

- (사업내용) 5개 종목 6팀 32명의 선수연봉 및 대회참가비, 훈련비 등 지원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4조의5(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
 - 제24조의4(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경기부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의5(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사항)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 (사업내용) 장애인 경기단체, 선수 육성지원으로 안정적 훈련여건 조성 및 장애인 체육진흥 활성화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 제2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지원 사업
 3.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사업
 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사업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사업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장애인생활 체육지도자 활동장려금’ 등의 사업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 (사업내용)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
-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 제24조(위탁운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나) 문화유산과

□ 무형문화재 전승기록화 학술용역

○ (사업내용) 무형문화재 원형자료 영상물, 관련 책자 제작 및 배포

○ (근거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제21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제21조(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시장은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충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수교육에 대한 보상금
2. 보유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
3.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

- 4. 전수교육생의 교육지원 비용
 - 5. 전수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
 - 6. 그 밖에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참고사항) 유사사업인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보고서 작성 용역'의 경우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를 모두 기입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다) 관광마케팅과

□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 (사업내용) 정확한 관광지 정보 및 편리한 관광안내 제공을 위한 표지판 신규설치 및 관광안내도 정비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시장의 책무)

- 제2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라) 문화콘텐츠과

□ 홍보물 제작 등

- (사업내용) e스포츠대회(한밭대전), 미디어제작경진대회, 웹툰, 독립영화 홍보지원 및 각종 공모사업 홍보자료 제작 등

- (근거법령) 미기재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 지원)

-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8. 문화콘텐츠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9.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10.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마) 시립미술관

□ 소장품전(상설전)

○ (사업내용)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

○ (근거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2항(사업)

-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 제4조(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1.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 및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
 -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바) 대전예술의전당

□ 기계, 전기, 통신시설 유지관리

- (사업내용) 예술의전당 내 설치·운영 중인 기계, 전기, 통신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
- (근거법령) 미기재
- (참고사항) 지원근거 항목에 지원사유를 기재
- (문제유형) 근거법령 미기재

□ 공연광고비 / 공연홍보물 인쇄비 / 공연 안내 리플릿 제작

- (사업내용) 기획공연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추진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조(설치)
 - 제62조(설치) ①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
 - ②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에 둔다.
- (참고사항) 해당 조례는 대전예술의전당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에 근거로는 부적합
- 시설에 관한 조례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가 있으나 시설의 정의,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음
- 타 홍보사업에서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2조의2(보조금 지원) 제9항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 있음
 - 9.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및 건축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

동 사업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사) 대전시립박물관

□ 한국 문화전 외 5개 사업

○ (사업내용) 박물관 내 상설 및 특별 전시사업 등

○ (근거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4조(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 제4조(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대전광역시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1.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 및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대전광역시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나. 복지환경위원회

1) 공동체지원국

가) 공동체정책과

□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지원

- (사업내용)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및 유권기관·단체 등이 참가하는 전국대회
- (근거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교체) 근거법령의 조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동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내용)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이익 도모
-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

·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11조(지원)

-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2.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 순환 경제 활성화 사업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사업내용)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간 소통채널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천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 계획 수립)

- 제9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역량강화와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법령추가) 동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자치구와 협력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 (사업내용)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기획운영의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인건비 및 직무역량 지원

○ (근거법령)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2019. 9)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학교 무상급식 지원

○ (사업내용) 초중고교생들에게 의무교육 차원의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별 재정 분담

○ (근거법령)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7조(지원내용)

-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급식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

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기관별 분담에 관한 내용을 정의한 것은 학교급식법보다 조례가 더욱 적합하며 학교급식법은 보호자의 경비 부담 경감에 관한 내용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등

-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 인건비 지원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례」 제10조(센터의 지원)
 -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4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법령변경)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처우개선)
 - 제10조(처우개선) ① 사회복지사 등은 보수 및 지위 등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향상 및 근무내용에 따라 자격수당, 위험수당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추가사항) 노숙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사업,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특별수당,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종사자 특별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노인복

지관 종사자특별수당,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특별수당,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정액급식비 사업에는 동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2) 청년가족국

가) 교육청소년과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사업 지원

- (사업내용) 5개 자치구 대상공모로 초·중·고 학생 대상 지역자원 활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근거법령)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사항) 광주광역시외 18개 자치단체에서진로체험 지원 및 센터 조례 제정

- (진로체험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정보 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운영·지원
 2.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3.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①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 ②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청 및 자치구에게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② 시장은 협력기관이 지속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협력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프로그램을 수시로 등록하여야 한다.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3) 보건복지국

가) 장애인복지과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 (사업내용) 청각장애인 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비 지원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등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 전남, 제주 등은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로 청각장애인의 일상 생활의 편의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안정적 지원 및 확대 필요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나) 보건정책과

□ 감염병업무 운영

- (사업내용) 재해대비 방역소독물품을 구매 비축하여 재해발생 시 적기 사용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감염병관리 사업 지침
 -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3. 제37조에 따른 시·도지사가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 3의2.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4.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 6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치료비 또는 조제료
 - 6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7.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 7의2. 제6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8. 제61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 8의2. 제70조의6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및 제7조의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홍보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의2(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4) 환경녹지국

가) 기후환경정책과

□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 (사업내용)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근거법령)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교육·홍보 등),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제2조(경비의 지원)

- 제2조(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대전광역시 의제 21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사업내용에 보다 적합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탄소포인트제 운영

- (사업내용) 가정, 아파트의 전기(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 (근거법령)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2항 제4호
 -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의2(탄소포인트제 운영)
 - 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탄소포인트제 정착을 위하여 인센티브에 소요되는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관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천연가스차량 구입 및 연료비 보조

○ (사업내용) 전세버스 노후차량의 천연가스 차량으로 전환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5조(사업 등)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지역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 및 차종별 보급 물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3. 충전기 등 설치 및 지원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나) 공원녹지과

□ 녹색도시 조성

○ (사업내용) 녹색도시 조성관련 기념행사 및 산림보지를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장하는 치유의 숲 행사에 필요한 물품, 현수막, 부스제작 등

○ (근거법령) 공원녹지 분야 시책 및 대전 무수동 치유의숲 운영방안 검토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녹화운동)

- 제7조(녹화운동) ①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운동을 개발·보급한다.
- ②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의한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푸른환경 조성과 녹화의식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나무심기 및 가꾸기행사와 녹화 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어린이, 보라매, 유림 뿌리, 공원이꿈이 등) 공원관리 사업 일체

○ (사업내용) 쾌적한 공원 환경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비

○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보조)」

-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24조(비용보조)

- 제24조(비용보조)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해당 사업 법령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보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항에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24조(비용보조)를 제시하는 것이 적함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다) 자원순환과

□ 실버청결도우미 사업

○ (사업내용)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

○ (근거법령) 폐기물 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법령추가) 「대전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5조(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 폐촉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해당연도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방침에서 정한 현장지도 단속·감시업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비용은 근무환경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법령추가) 「대전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당 법령조문은 폐기물 처리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법령 교체가 적합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라) 하천관리사업소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교체

○ (사업내용) 대전천, 갑천, 유등천 등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만족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화장실 신설 및 노후·재래식 화장실 개선

○ (근거법령)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법령교체)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하천관리청),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 근거법령은 물품관리의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으로 하천 시설물 설치 및 교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하천법」으로 근거법령의 교체 필요
- 대전광역시에는 하천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하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 불일치 / 관련 조례 부재
-

다. 산업건설위원회

1) 일자리경제국

가) 농생명정책과

□ 반려동물 문화축제

○ (사업내용)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문화교류의 장 제공으로 생명존중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13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복지 향상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 문화보급 및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업
2. 동물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동물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
5. 그 밖에 동물보호·복지향상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축산업 육성 지원

- (사업내용)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토바우』가입농가의 전용사료 및 한우사육농가의 조사료 구입비, 분뇨처리비용 및 한우수정란 이식비용 일부 지원
- 친환경 축산업 육성위한 미생물발효제 공급 등 사육환경개선 7개 사업
-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등 13개 사업지원
-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

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전남, 경남 등은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치단체장은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축산업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친환경축산환경보전 및 개선대책
3. 항생·항균제 및 화학약품 등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축산의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축산의 교육 및 홍보
6.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7. 안전관리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확대 방안
8.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내용) 자치단체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의 기술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축산의 기술교류 및 홍보
3.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훈련
4. 친환경축산물의 위생 및 품질 관리
5. 친환경축산 관련 기관·단체 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 **특화작물 생산단지 시설지원 / 시설오이관주용비료지원 / 농산물유통차량지원 / 식품전시회 참가**

-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등의 지원)
- (법령추가) 광의의 범위로 「대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사업 추진)가 적용 가능

-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나. 로컬푸드 직매장·직거래장터·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

다.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마. 로컬푸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가. 로컬푸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자 등 관계자 교육

나. 로컬푸드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약 등 지원 사업

3.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가. 여성·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

나.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다. 지역순환농업 촉진, 토종종자의 보존 및 생산관련 사업

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로컬푸드 생산 관련 사업

마. 로컬푸드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사업 일체

- (사업내용)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운영 및 도시민의 농촌체험 편익제공을 위한 4개 마을 8개 사업 추진
- (근거법령)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지원) 및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 벼 영농자재 통합지원, 근교농업육성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등

-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및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 3. 실직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사항) 농생명정책과의 사업들이 주로 상위법령만 존재하고 관련 조례가 부재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

- 경기, 강원, 경북, 경남, 광주 등 친환경 농업 관련 조례 존재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2) 과학산업국

가) 과학산업과

□ 과학기술인재 활용 지역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은퇴과학자 활용기반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성장 지원, 지역문제 해소, 일자리 확충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0조(과학기술진흥사업)

- 제20조(과학기술진흥 사업) ①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인력개발 촉진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시책사업
5.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 및 공동연구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6.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 증진사업
7. 삭제
8.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9.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법령수정)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
 2.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대전형 일자리 창출사업
 3. 과학기술인재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4.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
 5.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의 불일치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 (사업내용) 고경력 과학기술인 사회발전 참여 기회를 통한 과학인재 육성 및 과학대중화 도모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0조(과학기술진흥사업)
- 제20조(과학기술진흥 사업) ①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인력개발 촉진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시책사업
 5.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 및 공동연구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6.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 증진사업
 7. 삭제
 8.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9.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

하는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과학대중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 기술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
2. 과학동호회 및 생활과학교실 육성 지원
3.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4. 초·중·고 학생의 과학기술 교육지원
5.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6.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지역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
2.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대전형 일자리 창출사업
3. 과학기술인재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4.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
5.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수소충전소 운영(구축사업 포함)

- (사업내용) 정부의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확충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 중 하나인 수소충전소의 보급
- (근거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제4조의2(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내용은 부재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소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인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해당 조례에 수소충전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 필요

- (문제유형) 관련 조례 부재

3) 교통건설국

가) 운송주차과

□ 대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사업내용)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가 많은 대덕구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 불법 밤샘주차 등 생활불편 민원해소 및 화물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 (근거법령)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계획 방침 결정 / 2018. 9.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제3조(공영차고지 등의 설치)
 - 제3조(공영차고지 등의 설치) ①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와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설치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택시 감차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사업내용) 감차위원회 당연직 중 비공무원 및 위촉직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근거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항
 -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소속 시장·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 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

-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나) 건설도로과

□ 생활권 자전거 도로 정비

- (사업내용)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해 생활권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연결 및 정비로 자전거 이용 편리와 안전 도모
- (근거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

· 군· 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군·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도로 설치 시 도로의 연계·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도 지원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해당조례로 변경 필요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사업내용 불일치

□ **지하안전위원회 참석수당**

○ (사업내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 (근거법령) 미기재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

-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문제유형) 근거법령 미기재 /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다) 공공교통정책과

□ 보호구역 유지관리

○ (사업내용)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交通安全시설물 유지관리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근거법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

한 사후관리)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위해 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사업내용과 근거법령의 제시가 일부 일치하지 않고 세부적인 법령의 조항을 미기재하여 해당사업과 근거법령의 정합성 판단 불가

○ (법령추가)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3조(교통안전개선사업)

- 제3조(교통안전개선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행자·고령자·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업

2. 자전거·운수산업 안전에 관한 사업

3. 도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교통안전협력에 관한 사업

5.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6. 하상도로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 (사업내용) 서구 탄방초교 등 4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가 없는 통학로에 대해 보도를 신규 설치

○ (근거법령)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세부 추진계획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제2조(책무) 및 제3조(기본계획 수립)

- 제2조(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자원 확보계획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4) 도시재생주택본부

가) 도시정책과

□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 (사업내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임된 사항이나 시장이 입안·부의한 도시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자문) 수당
-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법령교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수당 등)
- 해당 조례에 위원회 참석 공무원을 제외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
 - 제64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또는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나) 도시재생과

□ 테미오래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 / 관사촌 시설관리

- (사업내용)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및 수목관리
- (근거법령) 문화예술촌 조성 기본계획(2014.12.), 관사촌 매입 및 활용계획(2015.8.), 2020년 테미오래 시설보수·정비사업 본예산 편성계획(2019.8.)
-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시설의 위치와 기능, 위탁사항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 근거로는 부적합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
 - 제3조(위치) 테미오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05번길 13(대흥동) 일원에 둔다.
 - 제4조(시설) 테미오래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시실
 - 2. 창작실
 - 3. 체험실
 - 4. 그 밖에 테미오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 제5조(기능) 테미오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지원
 -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발굴 및 보급
 - 3. 국내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4.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 5. 문화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테미오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3. 그 밖에 테미오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사전에 테미오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테미오래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테미오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유형) 조례 정비

다) 주택정책과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사업내용)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공동전기요금 50% 지원
-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당조례의 적용은 적합하나 조항의 변경이 필요
 - 제3조(지원내용) 대전광역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편성근거와 사업내용 불일치

라) 도시경관과

□ 갑천변 물빛길 조성 / 가수원교 및 대덕대로 야간경관 조성

- (사업내용) 대전의 대표 수변공간인 갑천변과 가수원교의 교량, 둔치 등과 도로변에 야간경관조명 설치
- (근거법령) 「경관법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제34조(야간경관의 증진)

- 제34조(야간경관의 증진) ①시장은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야간경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공공건축물
 - 2. 국가 및 시가 지정한 문화재
 - 3. 교량·육교
 - 4.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
 -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작품 중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건축정책위원회 참석수당

○ (사업내용)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근거법령)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 제4조(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총괄건축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건축·도시·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 적용 가능

-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마) 토지정책과

□ 도로명주소 홍보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사업 추진
-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제5조(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제7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 제5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시장은「도로명주소법」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다중이용시설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기관·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5) 건설관리본부

가) 투자유치과

□ 대전산업단지 관리 위탁

- (사업내용) 대전산업단지 관리 업무의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사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대전광역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 수탁자(“수탁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를 시행함에 있어 위탁의 근거를 시행자 명의 상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수탁자는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받은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6조(시설물 등의 위탁관리)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라. 교육위원회

1) 교육국

가) 민주시민교육과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사업내용) 초·중·고등학교에 건전한 시민의식 확산 및 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시행
- (근거법령) 2020년 민주시민 및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원 계획 알림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4조(책무), 제11조(지원), 제12조(교류·협력)
 -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류·협력)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통일대비교육

- (사업내용) 초·중·고 학생 및 통일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화민주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체험형 통일교육 실시
- (근거법령) 「통일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 2020년 민주시민 및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원 계획 알림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제5조(통일교육사업), 제6조(지원)

- 제5조(통일교육사업) 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실태 조사
 2.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
 3.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
 4.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 대전친구사랑3운동 운영지원

- (사업내용) 바른생활습관 형성 및 친밀한 교우 관계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화책 제작 및 공모전, 언론홍보
- (근거법령) 제10대 교육감 공약이행 실행계획 3-1-40.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제3조(학교폭력 예방사업)
 -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 조사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상담·치료 등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선도 등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홍보·교육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 (참고사항)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 학생, 교원, 학부모 연수’,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 중 시의 지원 등 자체비용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해당 조례의 적용도 가능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나)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급식관리지원

- (사업내용)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내실 있는 학교급식 운영
- (근거법령)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대전광역시교육청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 제6조
- 근거법령인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위원회 조례」는 2020년 7월 30일자로 폐지되어 차년도 사업에는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적용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2) 기획국

가) 교육복지안전과

□ 스쿨존 교통안전지도인력 지원

- (사업내용) 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교통안전지도 참여자 안전사고 피해보상 및 운영비 지원
- (근거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1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로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로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조항교체) 해당 사업의 근거법령 제2조는 법령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으로 법적근거로는 부적합하여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조항 변경
 -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유형) 편성근거와 편성내용 불일치

3) 공보관

□ 교육홍보사진촬영운영 및 옥외홍보매체운영

- (사업내용) 교육수요자에게 각종 교육정책 및 교육정보 제공
- (근거법령) 미기재
- (참고사항) 현행 대전광역시 교육청 조례 중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례 없음
 -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다룬 유사조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가 존재하나 소셜미디어에 한정한 홍보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문제유형) 근거법령 미기재 / 관련 조례 부재

4) 교육지원청(동부, 서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

- (사업내용)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근거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추가)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제5조((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및 제6조(자문)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 제6조(자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근거법령만 기재했고 해당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조항까지 기입 필요

○ (문제유형) 근거법령 추가 및 교체

4. 한계 및 시사점

□ 지속적인 조례정합성 일치 여부 점검 필요

- 문제 사업에 하나의 유형의 문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2개 이상의 복합적 문제사항이 발굴 되는 경우가 존재
- 복합적 문제유형의 해결은 예산설명서의 충실한 작성과 조례 정비 등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
- 편성근거와 사업내용이 일치된 예산설명서의 정착여부는 3년 이상의 장기 추적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 부서별 예산설명서 작성 편차 감소 방안 필요

- 문제사업은 모든 부서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부서별로 작성의 충실도가 차이가 존재
- 표준 작성 모델 개발과 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편차를 감소하여 일관된 예산설명서 작성으로 사업의 집행력 향상
- 또한 시민의 대변인인 의원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편리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견제와 균형 가능

□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우수작성법 전파 필요

- 사업내용과 법적근거에 합치하는 예산설명서 작성법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행정내부에 우수사례를 전파
- 근거에 타당한 사업추진은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추진 가능

□ 조례의 정합성 연구는 지속 필요성 높음

-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문제사항의 개선 여부 파악과 정확한 예산설명서 작성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추진
-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신규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 등 법적 변화에 따른 조례의 정합성 유지 여부를 확인 필요
- 신규예산 편성사업과 기존 조례와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의 법적 타당성 및 추진 동력 확보
-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정합성은 불필요한 사업의 일몰 및 삭감 등의 사업관리가 용이